



낙농정책연구소 출범의 의의와 낙농의 미래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2012년 10월 23일 개최된 한국낙농육우협회 2012년 제3회 이사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낙농정책연구소」의 출범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의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결단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낙농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소가 최초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초대 연구소장을 맡게 된 필자로서 낙농정책연구소 출범의 의의와 낙농의 미래에 대해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2. 낙농정책연구소 출범의 의의

그 동안 국내 낙농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초고속 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2년의 전례 없는 원유수급불균형을 계기로 사상 처음 쿼터제가 도입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제도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유·유제품소비는 지난 30년간(1970~2010) 연평균 9.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축산물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를 나타냈다. 그 같은 소비증가에 힘입어 국내 낙농과 유가공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음용유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함에 따라 낙농은 점차 축소균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소비가 늘어나는 유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금후 15년에 걸쳐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그 같

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금번 낙농정책연구소의 출범은 금후 예상되는 이 같은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낙농가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의 두 바퀴라 할 수 있는 생산자와 유업체는 물론 정부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같은 의미에서 금번 낙농정책연구소의 출범은 낙농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석(礎石)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낙농의 당면과제

낙농의 특성상 나라는 달라도 낙농제도는 매우 유사하다. 또한 낙농의 안정 성장은 그 나라의 낙농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 낙농제도는 선진국들이 20세기 초에 경험한 낙후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제화시대에 걸 길이 바쁜 낙농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국내 낙농의 당면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제도개혁이라 할 수 있다.

낙농제도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음용유의 소비확대다. 즉, 점차 음용유 생산에 국한되고 있는 국내 낙농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음용유의 소비확대야말로 국내 낙농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및 다양한 대체재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음용유소비를 늘린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유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를 위한 생산자와 유업체의 공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그 외에 국내 낙농은 생산, 가공 및 유통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외에 낙농분야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양성 및 제한된 인적 자원을 결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4. 맷음말

낙농의 생산물인 우유·유제품은 이미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낙농의 안정 성장을 위해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낙농 산업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과 역량결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